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 연구*

김다은**

정당성이란 결정을 내릴 도덕적·법적인 권리 또는 자격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이다. 법의 지배 원칙을 지키고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을 높게 인식할 때, 시민들은 이들의 결정에 따르고 복종하며 나아가 법의 지배 원칙에도 협력하고 순응할 것이다. 시민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가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당성 인식의 세부 차원 중 정서적 지지는 법원과 경찰 공통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배분적 공정성, 효과성 인식,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준수 의무는 각각 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경험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태도로서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 역시 아니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다면 이를 단기간에 되돌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당성 인식을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되찾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법의 지배, 법원 정당성, 경찰 정당성

1. 들어가는 말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민주주의 국가가 법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법의 지배의 실현은 권력을 통제하고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 이 논문의 초고는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주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학술회의 (2021년 11월 12일)에서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신뢰"로 발표되었고 대폭 수정을 거쳤다.

**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관료제, 거버넌스, 정책수단, 정책분석, 법의 지배 등이다(bonodaemun@korea.ac.kr).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사회의 안정 및 질서와 정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최장집 2008, 10). Weingast(1997)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련의 안정된 정치 규칙과 권리”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법의 지배는 민주적 선거제도와 규칙의 도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자유롭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이르는 민주화의 전 과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다(최경준 2017, 314). 만약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신뢰 관계 형성을 제약함으로써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동의와 그 결과에 대한 수용, 자발적인 사회참여의 활성화 역시 저해될 수 있다. 이처럼 오직 확고한 법의 지배 아래에서만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Dworkin, 2006).

그러나 법의 지배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과 사법제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권위주의 체제에서 목격되는 바와 같이 법이 효율적인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국가권력의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구속되도록 할 때 그리고 국민이 법과 규칙을 스스로 존중하고 준수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법을 집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물리적 힘(physical force)’을 동원하는 사회적 통제가 아닌, ‘도덕적 힘(moral force)’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최경준, 2017: 312). 그렇다면 시민의 법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과 법 집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에 주목하였다.

법원과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 준수와 이행에 대한 사법 판단을 내리는 법 관련 기관(legal institution)으로서 현실에서 법의 지배 원칙을 지키고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는 나아가 법에 대한 협력과 순응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Tyler, 2004; Tankebe, 2009). 먼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한다.¹⁾ 그 과정에서 국민은 재판의 주체 혹은 증인 등 관련자로 참여하며, 이들의 협력과 순응은 법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재판과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법원에 대한

1) 본 연구에서 법원은 일반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 전문법원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삼권분립 체계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비판 혹은 지지의 목소리를 내어 법원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활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받아들여 순응하며, 이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법규범을 집행하는 기관(law enforcement agency)으로서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경찰은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고 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협력과 순응이 필요로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 중에서 바로 정당성(legitimacy) 인식에 주목하였다. 정당성이란 결정을 내릴 권리(도덕적이고 법적인) 또는 자격과 관련된 일종의 규범적 개념이다. 국가기관의 존재가 정당하다면,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정 역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은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르거나 복종할만하다고 느끼게 한다.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은 경찰과 법원의 지시 혹은 결정을 받아들여 순응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chief political capital)인 것이다(Gibson, 2006).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가설을 제시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0년 법의 지배 국민 인식조사'이다. 본 연구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을 각각 지지와 준수의무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시민의 순응과 협력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과 그 영향요인

1. 정당성 인식의 개념과 중요성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이 일종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이들 기관의 지시와 결정에 순응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본다.²⁾ 국가기관들이 시민들의 순응을 두고 이를 보상하거

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정당성 개념은 국민주권 원리에 기초하여 주권을 지닌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됨으로써 부여받는 직접적인 의미의 민주적 정당성과는 구분되며,

나 제재하는 수단을 보유했는지와 상관없이, 기관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정당성이 시민들에게 이들 기관에 순응하고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Beetham, 1991). 특히 법원과 경찰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거나 구성되지 않으며, 민주적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Bühlmann & Kunz, 2011, 317). 그러나 이들 역시 주어진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법의 지시를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변화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예컨대 규칙을 적용하고 그 위반을 적발하며 위반 여부 판단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지시와 결정이 내려지게 마련이다. 직접 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경찰 신고와 증언, 법정에서 배심원과 증인으로서 역할 수행 등 시민들과의 호혜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Huang & Vaughn, 1996). 만약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낮은 편이라면, 법원이 정치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경험할 수 있다(Bühlmann & Kunz 2011, 320).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낮은 경우라면 시민들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범죄를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 기관이 지지와 준수를 기대할 권리와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여기는 정당성 인식은 법원과 경찰의 업무수행에 시민들의 순응과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당성 측정에 사용된 '일반화된 정서적지지(generalized affective support)'와 '준수의무(obligation to obey)'라는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였다(Tyler, 2006a; Tyler & Huo, 2002; Sunshine & Tyler, 2003; Gao & Zhao, 2018). 첫 번째로 정서적 지지는 그 동기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대한 지지(support)에 근거한 정당성 인식으로서, 시민들의 일종의 제도적 충성(institutional loyalty), 혹은 호의적인 정서적 성향(favorable affective orientation)에 해당한다. 즉, 시민들로부터의 충성(allegiance)과 지지(support), 그리고 신뢰(confidence)가 법원과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서적 지지는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의 일종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축적되는 호의적인 태도나 정서적인 호의의 장기적인 저장고(long-term reservoir)로 비유되는 확산적 지지(diffuse support)에 해당하는 개념이다.³⁾ 이는 특정한 법원 판결이나 경

국가기관으로서 지니는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Easton(1965)은 시민의 정치적 지지에 있어서 그 수준을 구체적인 것과 확산적인 것으로

찰의 처분 등 기관의 즉각적 산출에 대한 만족 여부와 관계된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와는 구별된다.

두 번째로 준수 의무는 권한(authority)에 근거한 정당성 인식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준수 의무가 높은 시민들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손익 혹은 도덕적 견해와 관계없이 당국의 지시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한다(Weber et al. 1947). Weber에 따르면 법적인 제재를 사람들이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Sunshine & Tyler, 2003). 사람들은 사법기관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라도, 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권한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인식한다. 단순히 사법기관이 처벌 또는 보상을 내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을 준수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기관의 특성 때문에 준수하게 된다는 것이다(Beetham, 1991).

기존 연구들에서 준수 의무는 정서적 지지(주로 신뢰)와 함께 시민의 협력과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성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로 함께 사용되어 왔다(Tyler & Huo, 2002; Sunshine & Tyler, 2003; Tyler, 2006; Hinds & Murphy, 2007; Tyler & Fagan, 2008). 그러나 최근 들어 정당성 측정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는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정당성 척도로 통합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Reisig et al., 2007; Tankebe, 2009, 2013; Sargeant, 2017). Tyler(2006a) 역시 경찰과 법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와 준수 의무 인식이 정당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에 해당되지만, 이들 간 상관관계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응답자들은 그들의 법원과 경찰에 대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generally positive affect toward the courts and police)와 그들의 개인적인 법 준수 의무(obligation to obey the law)를 각각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 정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척도가 아닌 독립적 개념으로서 준수 의무 자체를 연구하기도 한다(Tankebe, 2013; Johnson et al., 2014; Pryce et al., 2017; Sargeant, 2017; Bello & Matshaba, 2021).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는 근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지시에 따르게 만드는 동기의 명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Tyler, 2006a:

구분하였다.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는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정책 산출에 대한 동의 내지 승인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확산적 지지(diffuse support)는 장기적 관점에서 형성되는 '제도적 충성(institutional loyalty)', 즉 즉각적인 산출이나 결과에 대한 만족과 무관한 지지를 나타낸다.

27-29). 준수 의무가 정당성의 역할을 직접 드러낸다면, 확산적 지지는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과 법원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인식 요인을 분석하는데 지지와 준수 의무가 합쳐서 하나의 정당성 인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 인식의 서로 다른 측면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각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이러한 정당성의 차원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들 역시 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정당성 인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왔다(Tyler, 2003, 2006a, 2006b; Sunshine & Tyler 2003; Tyler & Fagan, 2008; Bühlmann & Kunz, 2011; Kochel et al., 2013). 그러나 그동안 시민의 경찰과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북미와 유럽과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만약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사회화 과정과 경험, 그리고 정보 습득 등을 통해 태도와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국가가 처한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당성 인식은 정량적 지표를 통해 평가된 객관적 성과가 아닌, 국민의 기대에 따른 상대적인 인식으로,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급격하게 변동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민주화가 공고화되어왔던 서구 선진국들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단기간에 걸친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과 설문 문항들을 활용하여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Tankebe, 2009; Salzman & Ramsey, 2013; Jiang et al., 2013; Bradford et al., 2014; Johnson et al., 2014; Cheng, 2018; Gao & Zhao, 2018).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행정 영역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다(김구, 2005; 이재영, 2011; 이수창, 2014; 임창호, 2018, 2020; 전용재·이창배, 2021; Lee & Cho, 2021). 그러나 법학 분야에서는 주로 법원 신뢰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 혹은 사법개혁 논의의 일부로 국한되어 왔다(이상원, 2012; 김도균, 2013; 노영보, 2013; 하태훈, 2013).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⁴⁾ 유성진(2010)의

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우리나라 형사사법 운용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대법원의 ‘법원 관련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민법의식조사, 사법정책연구원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

연구에서는 2008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여론조사자료를 실증분석하여 사법부가 갖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된 재판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법원 판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국한되었다. 때문에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정당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의 확립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가설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2.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정 대상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단편적 기억으로부터 그 태도 자체가 직접 상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점까지 경험하고 느낀 그 대상과 관련된 수많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들로부터 추출된다(Zaller & Feldman, 1992).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성 인식 역시 단기간에 단편적인 경험으로 결정되기보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전반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현재의 특정한 당국과 그 안의 개별 법관이나 경찰관 등에 대한 평가보다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여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하여 다른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각의 제도와 그것을 시행하는 개별 국가기관들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도균, 2013: 568). 예컨대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가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과 같은 가치가 강조되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법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법원의 경우 공정성과 불편부당성과 같은 가치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Bühlmann & Kunz, 2011).

입법 또는 행정 영역에 속하는 국가기관들은 이들의 성과가 입법 혹은 정책 등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출된다. 반면 법원과 경찰의 경우 일상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접촉 경험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더 많아서, 법률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는 인식조사들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인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정서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법원의 경우 시민들이 사법 영역에 대한 전문 법적 지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즉,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민들에게 전달된 판결 등의 정보에 기반하기보다 법원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나 인상에 더 크게 기인한다(유성진, 2010: 84). 실제 법원이나 경찰에 대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경험이나 정보가 이들에 대한 인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Tyler(2001)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법원이나 경찰의 결정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신뢰한다. 해당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이 부재한 경우에도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효과적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까지 포괄적으로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Gao & Zhao, 2018: 17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시민들의 경찰과 법원에 대한 인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또한 형사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경찰과 판결을 통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준법의식, 즉 법치주의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모형에 포함한다.

1) 공정성 인식

법을 현실에 적용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을 구현하는 법원과 경찰은 공정성을 기초로 각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는다. 흔히 공정성은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와 '배분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절차 공정성이란 경찰이나 법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절차가 공정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들 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자신들이 그 과정에서 존중받았다고 느꼈을 때 절차 공정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구체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가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며, 단순히 결과를 선호하는지 내지는 결과가 공정한 것인지와는 구별된다(Tyler, 2006a).⁵⁾ 반면 배분 공정성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5) 또한 절차 공정성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적법절차의 원리와도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의 경우 법에 정해진 모든 절차가 준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절차가 공정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을 둔다.

Tyler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공정성 인식 중에서도 절차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절차 공정성이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심리적 모형으로서 동기부여에 대한 절차 공정성 모형(Procedural model of motivation)을 연구하였다(Lind & Tyler, 1988; Tyler, 2006a, 2006b; Tyler & Huo, 2002; Sunshine & Tyler, 2003). 법원이나 경찰로부터 절차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 시민들은 이들과의 접촉에서 결과와 지시에 쉽게 순응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권위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같은 사회 규범과 가치를 내재화하게 된다(Reisig & Lloyd, 2009). 따라서 이들은 시민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인식보다 사법기관 정당성 인식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Sunshine & Tyler, 2003; Tyler, 2006a). 이처럼 절차 공정성의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내재화된 규범과 가치는 시민들로 하여금 법원과 경찰을 지지하고 이들에 순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행동의 기준점으로서 정당성 인식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하여 절차 공정성은 인지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의 다른 인식들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Tyler, 2006a: 108-109). 결과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되는 개별적 이해관계나 기대가 제각각 달라서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절차를 평가하는 것은 절차가 따라야 할 원칙이나 규칙 등의 준수 여부와 같은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가치를 확정하기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 쉽다. 따라서 시민들은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태도나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결정 또는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시민들이 소송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법 앞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면, 혹은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자로서 그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존중받는다면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법 위반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는 원칙에 따른다면 이들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1: 법원의 절차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경찰의 절차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배분 공정성은 정부 기관이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가, 즉 결과적 측면에서 공정성의 인식을 나타낸다. 즉,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과와 자신이 받은 혹은 받게 될 성과를 비교하여 이러한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기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책무에 따라서 경찰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 역시 재판과 상관없는 요인들로 인해 차별적인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이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배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법원과 경찰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이들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게 한다(Pryce et al., 2017; Bello & Matshaba, 2021). 반면 자신에 대한 대우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차별적이라고 느낄 때 시민들은 법원과 경찰에 분노하고 복종과 협력 의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Tankebe, 2009; Akinlabi, 2017).

가설 2-1: 법원의 배분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경찰의 배분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2) 효과성 인식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기관의 효과성 내지 성과에 대한 인식은 이들이 맡은 바를 원활하게 수행하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실제 이를 충족시켰는가에 대한 인식과 직접 연계된다. 예컨대 법원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이들이 서로 다른 실질적 영역에서의 상충하는 요구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혹을 갖게되면,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것이다(Dougherty et al., 2006: 180). Sunshine과 Tyler(2003)는 시민들의 눈에 경찰이 주어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여겨질 때 경찰의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경찰의 효과성 또는 성과란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관련된 경찰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평가와 연계된다(Bello & Matshaba, 2021: 267).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도 절차적 공정성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경찰과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Tyler, 2001, 2004, 2009; Sunshine & Tyler, 2003; Fagan & Tyler, 2004; Murphy et al., 2008). 따라서 시민의 경찰과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 수준은 시민들이 이들의 효과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설 3-1: 법원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2: 경찰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3)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

어떤 사회든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법원이나 경찰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시민의 보편적 인식은 이들이 법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법치라는 가치를 지키고 증진 시킨다는 추상적인 것에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과 경찰이 표방하고 지키고자 하는 법의 지배 원칙과 그에 대한 지지는 시민의 법원과 경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쉽다. 예컨대 법리에 대한 높은 존중을 지닌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법이나 법 집행 등 법의 지배 원칙을 지탱하는 기관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를 보인다(Salzman & Ramsey, 2013: 78). 따라서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가 높은 시민들은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고 수호하는 법원과 경찰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보일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한 이들이 내리는 지시와 결정을 준수할 것이다.

가설 4-1: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동의가 강할수록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2: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동의가 강할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Ⅲ.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의 정당성 인식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들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자료로 사용된 것은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에서 수행한 '2020 사법제도 인식조사' 결과이다.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이고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에 걸쳐 지역별 다단계화 후 성/연령별 인구수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 1,268건이 수집되었다. 무응답은 모든 변수에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주요한 변수들의 측정은 Tyler(2006a)가 개발한 설문 문항들을 활용하였으며 개별 설문 문항 및 척도는 아래 <표 1> 및 <표 2>에 제시한다.⁶⁾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정당성은 각각 법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로 구성된다. 정서적 지지의 구체적인 측정을 위해서 시민들은 정부 지도자나 기관들에 대한 정서적 정향을 나타내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지지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개념은 당국에 대한 “호의적인 정서적 지향”이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복하도록 만드는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Easton, 1965, 1975; Easton & Dennis, 1969).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부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연구뿐 아니라 기관 정당성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Tyler, 2002: 76).

정당성 인식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개인적인 손실이나 이득과 무관하게 해당 기관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고 여기는 의무감을 측정하는 것이다(Tyler, 2006a: 27). 이러한 정당성의 개념은 준수 의무(obligation to obey)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Weber(1947)의 연구에서 파생된 것이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들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의무를 개인적인 사익이나 도덕적 견해보다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

6) Tyler(2006a)는 1984년 시카고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원과 경찰에 대한 경험과 태도, 행동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년 후 한 차례의 조사를 재수행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Why people obey the law'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책과 이후 Tyler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표 1〉 법원 관련 주요 설문 문항과 변수 구성

변수명	설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정서적 지지 (Support)	Q10 ○○님은 법원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4점 척도: ①매우 신뢰-④전혀 신뢰 안함)	2.330 (0.716)	0.700
	Q48 동의 정도: 법원은 시민의 기본권을 잘 보호한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2.460 (0.717)	
	Q50 동의 정도 -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정직하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2.313 (0.719)	
준수의무 (Obligation to obey)	Q98 동의 정도 - 모든 사람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5점 척도: ①매우 동의-⑤전혀 동의 안함)	2.432 (0.747)	-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	Q34 ○○님은 법원의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4점 척도: ①매우 만족한다-④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430 (0.576)	0.727
	Q39 ○○님은 법원이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공정하게 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항상 공정하다-④거의 공정하지 않다)	2.256 (0.594)	
배분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Q35 ○○님은 법원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호의 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점 척도: ①모두를 동등하게 대한다, ②어떤 사람들 을 다른 사람들보다 호의적으로 대한다)	1.157 (0.364)	-
효과성 (Effectiveness)	Q32 ○○님은 전반적으로 법원이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매우 잘하고 있다-⑤매우 못하고 있다)	2.546 (0.419)	0.801
	Q33 ○○님은 법원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4점 척도: ①매우 만족한다-④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465 (0.576)	
	Q37 법원을 통해 ○○님은 얼마나 자주 사건이 만족스럽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항상 만족스럽게 해결된다-④거의 만족 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	2.251 (0.598)	

〈표 2〉 경찰 관련 주요 설문 문항과 변수 구성

변수명	설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정서적 지지 (Support)	Q15 ○○님은 경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4점 척도: ①매우 신뢰-④전혀 신뢰 안함)	2.501 (0.641)	0.766
	Q40 동의 정도-나는 경찰을 매우 존경한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2.290 (0.690)	
	Q41 동의 정도-전반적으로 경찰관들은 정직하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2.327 (0.730)	
준수의무 (Obligation to obey)	경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지지해 야 한다 (11점 척도: 0 '전혀 나의 의무 아님'-10 '전적으로 나의 의무')	6.12 (1.686)	0.832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의 지시대로 해야한다 (11점 척도: 0 '전혀 나의 의무 아님'-10 '전적으로 나의 의무')	6.05 (1.839)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	Q26 ○○님은 경찰의 문제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점 척도: ①매우 만족한다-④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495 (0.584)	0.730
	Q31 ○○님은 경찰이 시민들을 얼마나 자주 공정하게 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항상 공정하다-④거의 공정하지 않다)	2.298 (0.610)	
배분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Q27 ○○님은 경찰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호의 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점 척도: ①모두를 동등하게 대한다, ②어떤 사람들 을 더 호의적으로 대한다)	1.192 (0.394)	-
효과성 (Effectiveness)	Q24 ○○님은 전반적으로 경찰이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매우 잘하고 있다-⑤매우 못하고 있다)	2.594 (0.411)	0.772
	Q25 일반적으로 ○○님은 경찰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점 척도: ①매우 만족한다-④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539 (0.565)	
	Q29 사람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 ○○님은 경찰이 만족 스러운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①항상 제공한다-④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2.314 (0.624)	

어 있다. 이처럼 정당성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은 서로 상당히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도 정당성을 측정함에 두 가지 차원에 속하는 문항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보다 각각을 정당성 인식을 나타내는 별개의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주의할 점은 Tyler(2006a)는 시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경찰과 법원의 정당성을 측정하는데 준수 의무의 차원에서 법에 대한 준수 의무(obligation to obey the law)라는 동일한 문항을 양자 모두에 사용하였다. 즉 일반적인 법 원칙에 대한 준수 의무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 원칙에 대한 준수 의무와 경찰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수 의무는 다르다고 구분한다. 따라서 경찰과 법원에 대한 준수 의무는 구체적인 준수 대상으로서 경찰과 법원을 포함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정당성 외에 주요 변수로서,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 또한 Tyler(2006a)의 설문에서 사용된 절차적 공정성 관련 문항들과 배분적 공정성에 관한 단일 문항을 각각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배분 공정성의 경우 단일 문항이며 응답 척도가 모두를 동등하게 대한다=배분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호의적으로 대한다=배분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으로 양분된 것을 고려하여 전자를 1, 후자를 0으로 변경하여 코딩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문항은 전반적으로 이들이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만족, 만족스러운 업무 처리 결과 빈도에 대한 만족도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는 개별 설문 문항들과 이들의 신뢰도 계수는 법원의 경우 아래 <표 1>, 경찰의 경우 <표 2>에 각각 제시한다. 법원과 경찰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일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역코딩을 수행하여 합산하였다.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의 구체적 측정에는 Tyler(2006a)의 연구에서 제시된 법의 지배 원칙 관련 문항들 가운데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대한 지지 관련 질문들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원칙에 대한 준수 의무를 높게 느낄수록 값이 크도록 역코딩을 수행하고 평균을 내어 변수화하였다.

<표 3>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 관련 주요 설문 문항과 변수 구성

변수명	설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법의 지배 지지 (Rule of Law)	동의 정도 -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 반	2.20 (0.651)	0.754
	Q52 하는 법일지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Q53 동의 정도 - 나는 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2.14	

변수명	설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0.721)	
Q54	동의 정도 -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2.09 (0.816)	
Q55	동의 정도 - 법을 위반하면서 품위를 지키는 것은 어 렵다 (4점 척도: ①매우 동의-④전혀 동의 안함)	2.27 (0.821)	

3. 응답자의 특성

중속변수와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응답자의 특성들을 변수화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경찰 및 법원과의 접촉 또는 경험은 이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모든 선행연구에서 항상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험 여부 외에는 그 상황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관련된 문항들을 통합하여 각각 법원과 경찰에 대한 경험 유무를 묻는 가변수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0=경험이 없다, 1=경험이 있다.)⁷⁾ 그리고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치적 특성 또한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이는 크게 정치적 관심과 당파적 성향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정치적 관심은 “○○님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정치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는 정당 지지도(2020년 총선 등록 정당을 기준으로 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열린 민주당)지지, 미래통합당 지지, 무당파의 3개의 가변수)를 포함하였다.

그 외에 선행연구들에서 식별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 특성들로서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이 있다. 사회화 과정과 삶에서의 경험에 따라 각각 다른 성별, 연령의 사람들은 법원과 경찰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확실하다. 선행연구 역시 법원과

7) 경찰과 관련된 경험으로는 경찰에 전화 또는 접촉 경험(지난 몇 년간 범죄를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종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과 경찰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경험(지난 몇 년간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 중 검문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을 질문하였다. 법원과 관련된 경험은 피고 또는 원고로 법정에 출석한 적 있는지, 또는 증인이나 방청, 배심원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두 문항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 1을 부여하고, 모두 아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0을 부여하였다.

경찰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영향이 없다는 연구들이 비일관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 성별(1=여성, 0=남성), 교육수준(1=대학 재학 이상, 0=고등학교 졸업 이하)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추가로 법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사는 지역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Reisig & Parks, 2000; Jiang et al., 2013: 498). 따라서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대한 가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설문 응답자의 특성

변수명	구분	N	평균 (혹은 비율)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경찰	없음	1,059	(84.3%)	-	-	-
	있음	197	(15.7%)	-	-	-
법원	없음	1,239	(98.4%)	-	-	-
	있음	20	(1.6%)	-	-	-
법의 지배 인식		1,267	2.823	0.577	1	4
정치적 관심		1,180	2.270	0.692	1	4
정치적 특성	민주당 지지	508	(40.1%)	-	-	-
	미래통합당 지지	297	(23.4%)	-	-	-
	무당파	326	(25.7%)	-	-	-
연령대	19~29세	217	(17.1%)	-	-	-
	30대	209	(16.5%)	-	-	-
	40대	246	(19.4%)	-	-	-
	50대	252	(19.9%)	-	-	-
	60세 이상	344	(27.1%)	-	-	-
성별	남성	634	(50.0%)	-	-	-
	여성	634	(50.0%)	-	-	-
교육	고졸 이하	676	(53.3%)	-	-	-
	대학 이상	592	(46.7%)	-	-	-
지역	서울	257	(20.3%)	-	-	-
	인천/경기	415	(32.7%)	-	-	-
	강원	39	(3.1%)	-	-	-
	대전/충청	129	(10.2%)	-	-	-
	광주/전라	122	(9.6%)	-	-	-
	대구/경북	121	(9.5%)	-	-	-
	부산/울산/경남	185	(14.6%)	-	-	-

위의 <표 4>에서 제시한 설문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대부분 응답자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15.7%가 전화 내지 접촉 경험이 있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중 20명만이 법원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응답이 사법당국과의 실질적 경험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간접적으로 인식되거나 포괄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가깝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법의 지배 인식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 원칙에 부정적인 편이 아니라, 이를 지지하는 쪽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정치적 특성에 해당하는 정치적 관심에 있어서는 응답 빈도가 많이 있다(3.2%), 어느 정도 있다(30.8%), 별로 없다(54.3%), 전혀 없다(11.3%)로 나타나서, 관심이 없는 쪽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음 장에서는 시민들의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각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 순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IV. 분석 결과

1.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아래 <표 5>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각각 종속변수가 법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인 모형에서 분석에 사용된 설문 응답들을 토대로 기술통계를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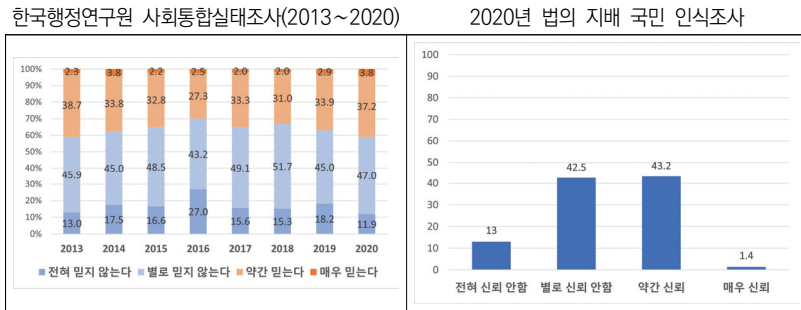
<표 5> 법원 관련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정서적 지지	1,222	2.369	0.569	1	4
	준수의무	1,213	3.639	0.789	1	5
	절차공정성	1,213	2.350	0.519	1	4
법원변수	배분공정성	1,213	0.153	0.360	0	1
	효과성	1,213	2.428	0.448	1	4

최솟값과 최댓값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속변수 중에서 정서적 지지는 준수의무보다 그 응답이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에 있어서 호의적인 정서에 기인한 지지가 이들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낮다는 점을 나타낸다. 정서적 지지를 구성하는 개념 중 법원에 대한 신뢰에 관한 기존의 설문 결과들을 추가로 살펴보면 법원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원에 대한 신뢰를 지닌 시민들은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 또한 높은 경우가 많다(Gibson et al., 2003). 비록 제도적 정당성 개념 전체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신뢰에 대한 측정은 정당성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아래 <그림 1>은 왼쪽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조사한 결과이며, 오른쪽은 2020년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응답자들의 신뢰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 법원 신뢰도 조사 결과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0) 자료 재구성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프 상단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하단에 위치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지난 8년간 꾸준히 낮게 나타났다. 그래프 상단의 ‘매우 믿는다’는 응답은 ‘전혀 믿지 않는다’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만성적인 저신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비리와 사법부패, 여기에 사법 농단에 이르기까지 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은 그동안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화 이후 오히려 이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사법신뢰의 위기라고 이를 표현하기도 한다(최선, 2016; 장영수, 2017; 서한별·황의갑, 2019). 최근의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 수준은 이들에게 주어진 기대를 제대로 충족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그림 1>의 오른쪽에 제시된 2020년의 설문 결과에서도 법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3%에 달하였으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

(44.6%)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55.5%)보다 낮았다. 한국행정연의 신뢰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신뢰 응답이 나타났지만, 법원에 대한 저신뢰, 즉 정서적 지지가 저조한 현편이라고 볼 수 있다.⁸⁾

법원 관련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법원 관련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법원	정서적 지지	준수 의무	절차 공정성	배분 공정성	효과성	법치 의식
정서적 지지	1	.298**	.602**	.331**	.611**	.341**
준수 의무		1	.182**	.150**	.169**	.313**
절차 공정성			1	.407**	.789**	.199**
배분 공정성				1	.411**	.069*
효과성					1	.169**
법치 의식						1

**<0.01

종속변수 중 정서적 지지는 또 다른 종속변수인 법원의 지시에 대한 준수 의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상관계수 값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적 지지와 절차 공정성, 효과성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와 비교하여 법원에 대한 준수 의무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다. 법의 지배에 대한 의식은 주요 변수들 대부분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결과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차원으로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를 각각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8) 같은 설문에서 측정된 다른 제도에 대한 신뢰와 비교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신뢰한다는 응답의 격차로 비교해보면 국회(85.8%), 정당(74.9%), 중앙정부(23.9%), 법원(10.8%), 경찰(-7.8), 행정기관(-13.6%) 순으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경찰과 법원에 대한 저신뢰 현상이 이들 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만연한 저신뢰 현상의 일부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경찰과 법원은 상대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을 각각 놓고 보았을 때 매우 신뢰와 약간 신뢰 범주에 대한 선택이 적거나 크게 높지 않은 점,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인하여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 7〉 법원 정당성 인식 회귀분석

변수명	정서적 지지		준수의무	
	Coef.	S.E.	Coef.	S.E.
절차공정성	0.280***	0.038	0.163**	0.069
배분공정성	0.116***	0.036	0.092	0.067
효과성	0.411***	0.044	0.071	0.081
법의 지배 지지	0.214***	0.022	0.270***	0.040
법원경험	0.006	0.103	0.342*	0.187
정치관심	-0.036*	0.019	0.038	0.034
연령	0.003**	0.001	0.001	0.002
여성	0.048*	0.025	-0.007	0.045
대재 이상	0.086***	0.031	0.093*	0.056
민주당 지지	-0.006	0.044	0.042	0.080
미통당 지지	-0.002	0.048	0.060	0.088
무당파	-0.029	0.045	0.144*	0.083
인천/경기	-0.164***	0.033	-0.202***	0.061
강원	-0.166**	0.075	-0.105	0.137
대전/충청	0.003	0.046	-0.213**	0.085
광주/전라	-0.240***	0.048	-0.397***	0.088
대구/경북	-0.107**	0.048	-0.065	0.087
부산/울산/경남	-0.099**	0.040	-0.244***	0.073
상수	0.110	0.114	2.240	0.210
N	1,222		1,213	
R ²	0.491		0.119	

***p<0.01, **p<0.05, *p<0.1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는 서울임

첫 번째로 정서적 지지 모형에서는 법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 효과성 인식,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의 주요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법원 정당성 인식에 대한 모든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법원 효과성 혹은 성과에 대한 인식의 회귀계수는 0.411(p<0.05)으로 정서적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효과성의 영향이 약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법원에 대한 준수 의무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과 다르게 주요 변수 중에서 절차 공정성 인식과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에서 배분 공정성 인식과 효과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정당성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법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경우, 두 가지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 변수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다. 기타 응답자의 특성 요인들은 두 가지 모형에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련 경험은 빈도 자체가 높지 않았지만, 법원에 대한 준수 의무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법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법원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외에 연령이나 성별은 법원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준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을 통해 알 수 없었다.

2. 경찰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기술통계

아래에서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찰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 그리고 절차 공정성과 배분 공정성, 효과성의 기술통계량을 각각 제시하고,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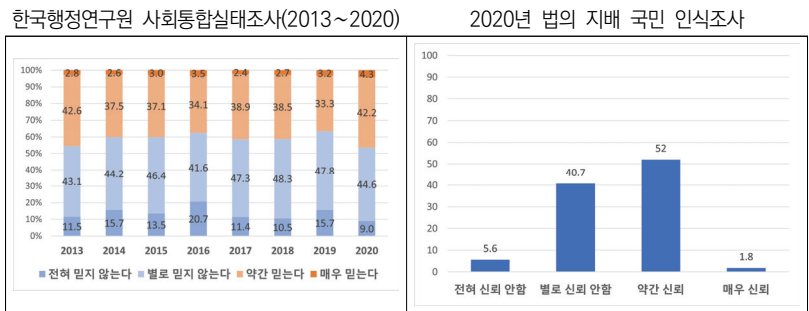
〈표 8〉 경찰 관련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정서적 지지	1,228	2.370	0.558	1	4
	준수 의무	1,225	6.091	1.630	0	10
	절차공정성	1,225	2.401	0.522	1	4
경찰변수	배분공정성	1,225	0.184	0.387	0	1
	효과성	1,225	2.487	0.440	1	4

위의 〈표 8〉은 결측값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경찰 정당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응답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평균값을 보면 경찰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 인식은 다소 긍정에 가까운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경찰에 대한 감정적 지지의 한 구성요소로서 응답자들의 경찰 신뢰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법원 신뢰와 마찬가지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와 2020년 설문 의 응답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2> 경찰 신뢰도 조사 결과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13~2020) 자료 재구성

왼편에 제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년도에서 경찰을 믿는다는 응답이 믿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적게 나타났다. 오른쪽에 제시된 2020년 법의 지배 설문 결과를 보면,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8%로 낮았지만,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의 합(46.3%)보다 근소하게 큰 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찰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53.8%),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44.6%) 과반에 미달한 것과 비교하면 각 기관에 대한 신뢰의 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확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행정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쪽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경찰 역시 저신뢰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임창호 2020, 220). 다음으로 경찰 관련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경찰 관련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경찰	정서적 지지	준수 의무	절차 공정성	배분 공정성	효과성	법치 의식
정서적 지지	1	.272**	.644**	.368**	.669**	.260**
준수 의무		1	.284**	.191**	.320**	.125**
절차 공정성			1	.412**	.804**	.223**
배분 공정성				1	.405**	.092**
효과성					1	.180**
법치 의식						1

**<0.01

위의 〈표 9〉에서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경찰 관련 주요 변수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절차 공정성은 준수 의무보다 정서적 지지와 상대적으로 큰 상관계수 값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효과성 역시 정서적 지지와의 상관계수 값이 경찰의 결정과 지시에 대한 준수 의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는 대부분 변수와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회귀분석

아래 〈표 10〉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0〉 경찰 정당성 인식 회귀분석

변수명	정서적 지지		준수 의무	
	Coef.	S.E.	Coef.	S.E.
절차공정성	0.255***	0.037	0.191	0.141
배분공정성	0.123***	0.032	0.281**	0.123
효과성	0.488***	0.043	0.808***	0.166
법의 지배 지지	0.128***	0.021	0.145*	0.079
경찰경험	-0.036	0.031	0.192	0.120
정치관심	-0.035*	0.018	0.181***	0.068
연령	0.001	0.001	0.002	0.004
여성	0.008	0.024	0.045	0.090

변수명	정서적 지지		준수의무	
	Coef.	S.E.	Coef.	S.E.
대재 이상	0.029	0.029	0.031	0.112
민주당 지지	0.051	0.041	-0.045	0.159
미통당 지지	0.073	0.046	0.065	0.175
무당파	0.015	0.043	0.264	0.165
인천/경기	-0.104***	0.032	-0.805***	0.122
강원	0.024	0.070	-0.477*	0.270
대전/충청	0.169***	0.044	0.084	0.168
광주/전라	0.039	0.046	-0.555***	0.175
대구/경북	-0.085*	0.045	-0.229	0.171
부산/울산/경남	-0.011	0.038	-0.302**	0.147
상수	0.154	0.109	2.908	0.420
N	1,228		1,225	
R ²	0.519		0.172	

***p<0.01, **p<0.05, *p<0.1

지역 변수의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는 서울임

정서적 지지 모형에서는 절차 공정성과 배분 공정성, 효과성 인식뿐 아니라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 모두 종속변수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을 비교하면 효과성이 경찰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0.488, p<0.05).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준수의무에서도 효과성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0.808).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절차 공정성은 준수의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경찰과 직접 경험이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Dougherty et al., 2006).

법원과 경찰 모형을 비교해보면, 정서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법원에 대한 준수의무와 경찰에 대한 준수의무는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제외하면 각각 변수들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법원에 대한 준수의무에는 절차 공정성이 유의한 반면, 경찰에 대한 준수의무에서는 배분 공정성과 효과성 인식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법원과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이에 따른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타 응답자의 특성 변수 중에서는 법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정서적 지지 역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각 영역에 속하는 국가기관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저신뢰 현상을 토대로 할 때, 정치에 관심이 높을수록 이들 국가기관에 대하여 더욱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찰에 대한 준수 의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분석 결과는 경찰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은 이들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와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다.

V. 맺는 말

정당성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규범적인 인식이나 태도로서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단기간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정당성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면,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멈추거나 역전시키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민들의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으로서 정서적 지지와 준수 의무가 각각 절차적 공정성과 배분적 공정성, 효과성 인식 그리고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는 법원과 경찰 모두의 정당성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공정성이나 효과성 인식의 경우에도 정당성 인식의 세부 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정당성 인식을 전제로 두고 봤을 때 가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절차 공정성이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 절차 공정성보다 효과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 Sunshine과 Tyler(2003)은 사회에 분쟁이 많고 혼란스러운 경우 절차나 권리의 문제보다 경찰의 효과성에 집중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 사회 역시 시민들에게 법원과 경찰의 절차 공정성보다 효과성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준수 의무의 경우에는 법원과 경찰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민들로부터 정서적 호감을 바탕으로 한 지지를 얻는 것과

결정이나 지시에 대한 준수 의무감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향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법원이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인식의 영향을 통해 구축되는 태도에 가깝다. 당장 필요로 된다고 해서 급하게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성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 기관이 누리는 '지지의 완충(Cushion of Support)'이 쉽게 바뀌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절대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Tyler, 2006a: 30). 만약 법원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다면,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과 경찰은 각자 맡은 바 업무 처리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절차뿐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분석 결과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단순히 법원과 경찰 그 자신들에게만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응답자의 경찰에 대한 경험 여부는 이들의 정당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었다. 반면,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는 모든 모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시민들의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사법제도와 그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한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개별 기관들의 노력 이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법의 지배 원칙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추가로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서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관련 뉴스나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원과 경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 역시 얻기 쉽다. 즉, 이들 기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오히려 이들을 감정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던 일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로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선진국들과 달리 국민의 정치 의식(political awareness) 수준(정치 참여, 교육 수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측정된)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적 지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법에 대한 냉소주의 혹은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였다(Salzman & Ramsey, 2013; Çakır & Şekercioglu 2016). 사법부는 법에 대한 해석 권한뿐 아니라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법과 행정부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하태훈, 2013). 그

러나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법원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낮아진다는 점은, 사법부가 현재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로서 시민의 곁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지만, 무능력과 기강 해이 등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과 경찰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인식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수성이라는 맥락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구. 2005.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신뢰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경찰활동의 성과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49-72.
- 김도균. 2013. “집합행동, 신뢰, 법-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4(3): 543-599.
- 노영보. 2013.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593-601.
- 서한별·황의갑. 2019.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범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8(1): 191-218.
- 유성진. 2010.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대중매체의 재판 관련 보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한국과 국제정치》 26(4): 57-87.
- 이상원. 2012.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53(3): 307-381.
- 이수창. 2014. “시민의 경찰 신임성 결정요인 분석.” 《경찰학연구》 14(2): 183-213.
- 이재영. 2011. “경찰-주민접촉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8(3): 27-52.
- 임창호. 2018.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2): 245-276.
- _____. 2020.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의 영향 요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효과성 인식의 중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2): 215-244.
- 장영수. 2017. “사법개혁,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의 사이에서.” 《유럽헌법연구》 24: 263-290.
- 전용재·이창배. 2021. “경찰접촉과 공정성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영향요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4): 133-151.
- 최경준. 2017. “선거 민주주의와 법치: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법집행의 공정성.” 《한국경찰학회보》 19(6): 309-342.
- 최선. 2016. “Diagnosis of and Finding Alternatives to the “Crisis of Judicial Trust” for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동서연구》 28(3): 31-64.
- 최장집. 2008.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 안규남·송호창 옮김, 아담 쉘보르스키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 하태훈. 2013.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579-592.

- Akinlabi, Oluwagbenga Michael. 2017 "Do the police really protect and serve the public? Police deviance and public cynicism towards the law in Nigeria."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7(2): 158-174.
- Beetham, Davi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International Press.
- Bello, Paul Oluwatosin, & Matshaba, Thabiso Donald. 2021. "Exploring procedural justice, obligation to obey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24(2): 262-277.
- Bradford, Ben, Murphy, Kristina, & Jackson, Jonathan. 2014. "Officers as mirrors: Policing, Procedural Justice and the (Re)Production of Social Identity." *BRIT. J. CRIMINOL.* 54: 527-550.
- Bühlmann, Marc, & Kunz, Ruth. 2011. "Confidence in the Judiciary: Comparing the Independence and Legitimacy of Judicial Systems," *West European Politics* 34(2): 317-345,
- Çakır, Aylin Aydin, & Şekercioğlu, Eser. 2016.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awareness and level of democracy." *Democratization*, 23(4): 634-656.
- Caldeira, Gregory A., & Gibson, James L. 1992. "The Etiology of Public Support for the Supreme Cour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 635-664.
- Cheng, Kevin Kwok-yin. 2018. "Legitimacy in a Postcolonial Legal System: Public Perception of Procedural Justice and Moral Alignment Toward the Courts in Hong Kong." *Law & Social Inquiry* 43(1): 212-228.
- Dougherty, George W., Lindquist, Stefanie A., & Bradbury, Mark D. 2006. "Evaluating Performance in State Judicial Institution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Georgia Judiciary." *State & Local Government Review* 38(3): 176-190.
- Dworkin, Ronald. 2006. *Justice in Robes*. Cambridge, MA and London: Belknap Harvard.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435-457.
- Easton, David, & Dennis, Jack. 1969.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of Political Legitima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o, Jingkang, & Zhao, Jinhua. 2018. "Legitimacy versus Morality: Why Do the Chinese Obey the Law?" *Law and Human Behavior* 42(2): 167-180.
- Gibson, James L. 2006. "Judicial Institutions." in R.A.W. Rhodes, Sarah A. Binder, and Bert A. Rockmann (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bson, James L., Caldeira, Gregory A., & Spence, Lester Kenyatta. 2003. "Measuring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2): 354-367.
- Hinds, Lyn, & Murphy, Kristina. 2007.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Using procedural justice to improve police legitimacy."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0: 27-42.
- Huang, Wilson W.S., & Vaughn, Michael S. 1996. "Support and confidence: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In Flanagan, T. J., & Longmire, D. R.(Eds.), *Americans view crime and justice: A national public opinion survey* (pp. 31-45). Thousand Oaks: Sage.
- Jiang, Shanhe, Wu, Yuning, & Wang, Jin. 2013. "Citizens'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 Empirical Study of Guangzhou,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7(4): 495-518..
- Johnson, Devon, Maguire, Edward R., & Kuhns, Joseph B. 2014. "Public Perceptions of the Legitimacy of the Law and Legal Authorities: Evidence from the Caribbean." *Law & Society Review* 48(4): 947-978.
- Kochel, Tammy Rinehart, Parks, Roger B., & Mastroski, Stephen D. 2013. "Examining police effectiveness as a precursor to legitimacy and coopera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30(5): 895-925.
- Lind, E. Allan, & Tyler, Tom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York, NY: Springer.
- Murphy, Kristina, Hinds, Lyn, & Fleming, Jenny. 2008. "Encouraging Cooperation and Public Support for Police." *Policing and Society* 18:

138-157.

- Pryce, Daniel K., Johnson, Devon, & Maguire, Edward R. 2017. "Procedural Justice, Obligation to Obey, and Cooperation with Police in a Sample of Ghanaian Immigra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4(5): 733-755.
- Reisig, Michael D., & Parks, Roger B. 2000.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Neighborhood context: A Hierarch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17(3): 607-630.
- Reisig, Michael D., Bratton, Jason, & Gertz, Marc G. 2007.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finement of Process-based Policing Measur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8): 1005-1028.
- Reisig, Michael D., & Lloyd, C. 2009. "Procedural Justice, Police Legitimacy, and Helping the Police Fight Crime: Results from a Survey of Jamaican Adolescents." *Police Quarterly* 12(1): 42-62.
- Salzman, Ryan., & Ramsey, Adam. 2013. "Judging the Judiciary: Understanding Public Confidence in Latin American Courts."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55(1): 73-95.
- Sargeant, Elise. 2017. "Policing and collective efficacy: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lice effectiveness, procedural justice and the obligation to obey police," *Policing and Society* 27(8): 927-940.
- Sunshine, Jason., & Tyler, Tom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37(3): 513-548.
- Tankebe, Justice. 2009.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Criminology* 47(4): 1265-1293.
- _____. 2013. "Viewing Things Differently: The Dimensions of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Criminology* 51(1): 103-135.
- Tyler, Tom R. 2001. "Trust and Law Abidingness: A Proactive Model of Social Regulation."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81(2): 361-400.
- _____. 2002. "A National Survey for Monitoring Police Legitimacy." *Justice Research Policy* 4: 71-86.
- _____.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283-357.

- _____. 200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3(1): 84-99.
- _____. 2006a.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2006b.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375-400.
- _____. 2009. "Legitimacy and Criminal Justice: The Benefits of Self-Regulation."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7:307-359.
- Tyler, Tom R., & Fagan, Jeffrey. 2008. "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y?"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6(1): 231-276.
- Tyler, Tom R., & Huo, Yuen J. 2002.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New York: Russell-Sage.
- Weber, Max, Alexander Morell Henderson, & Talcott Parsons.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NY: The Free Press.
- Weingast, Barry R. 1997.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2): 245-263.
- Zaller, John, & Feldman, Stanley. 1992.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 579-616.

Citizens' Perceptions on the Legitimacy of the Courts and Police in Korea

DaEun Kim

As a normative concept, legitimacy represents moral and legal rights to make decisions. When people's perceived legitimacy of a state institution is high, they are more likely to follow and accept its decisions. In this regard, legal institutions need to secure legitimacy from the public. However,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is not a given. It can be formed only through years of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Focusing on the perceived legitimacy of the courts and police, this study analyzed survey results of Korean citizens.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 was measured in two different dimensions: affective support and obligation to obey. Results show that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effectiveness, and support for the rule of law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ublic's affective support of the courts and police. Conversely, people's obligation to obey the courts and the police a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e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does not fluctuate much, so it doesn't decline in a short period. But it is also difficult to increase. Thus, constan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ublic's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to enhance the rule of law in society.

※ Keywords: Rule of law, Legitimacy, Legitimacy of courts, Legitimacy of police